

## "한국 책임·청렴성 개선 필요"

[연합뉴스 2006-10-25 10:01]

"고위공직자 무죄율 지나치게 높아"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시스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책임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성에 대해서도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리 연루 고위공직자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부패척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은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 가량 높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나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현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은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확장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 기업의 형식적 독립성 확보 등의 반부패노력을 했지만 책임성이나 투명경영, 청렴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컴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옹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이날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사례연구'의 결과로 발표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http://ti.or.kr>)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

bkkim@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①/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144806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1448063)

## "한국 공무원에 엄격한 법집행 미흡"(종합)

[연합뉴스 2006-10-25 16:22]

"책임·청렴성 개선 필요"...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도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 가량 높아 법이 공무원들에게 관대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해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책임성과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성에 대해서도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나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현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은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확장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 기업의 형식적 독립성 확보 등의 반부패노력을 했지만 책임성이나 투명경영, 청렴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컴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옴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한국사회가 반부패를 위한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청렴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근간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사례연구'의 결과로 발표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g)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

bkkim@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①/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1448705](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1448705)

# “기소된 고위관료 무죄율 일반인 10배”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반부패시스템 낮은 평가

법 집행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부패를 막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5일 한국 사회 청렴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투명성만 다소 향상됐을 뿐 공정한 법집행, 청렴성, 책임성 등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조사는 행정부·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부문 10개, 정당·시민사회·기업 등 민간부문 5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법 집행을 문제 삼았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은 2003년 36%, 2004년 38%로 전체 기소율 56%에 훨씬 못 미쳤다.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7.72%)도 일반인들에 비해(0.79%) 10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검찰청,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사전·사후 부패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책임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와 외부 감사가 모두 비효율적”이라며 “내부 고발자 보호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부문 투명성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431개 공공기관 중 404곳이 윤리강령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271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88%(2003년)에 이르고 민원처리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에 대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청렴성 책임성 등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뇌물공여·횡령·배임 등이 여전히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과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관행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에도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철기자 wonchul@kmib.co.kr

## "한국 공무원에 엄격한 법집행 미흡" 2006-10-25 17:13

"책임·청렴성 개선 필요"...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인쇄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도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 가량 높아 법이 공무원들에게 관대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해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책임성과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성에 대해서도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나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현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은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확장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 기업의 형식적 독립성 확보 등의 반부패노력을 했지만 책임성이나 투명경영, 청렴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콤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옴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한국사회가 반부패를 위한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청렴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근간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사례연구'의 결과로 발표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www.transperancy.org)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

(서울=연합뉴스)

## "한국 투명성 높지만 책임성 낮아"

[YTN 2006-10-25 18:16]

[이선아 기자]

국제투명성기구는 '2006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공 부문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등 투명성이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에 책임 소재와 보고 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책임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명성 기구는 또 한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비리 연루 고위공직자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324306](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324306)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책임·청렴성 개선 필요"

[연합뉴스 TV 2006-10-25 15:28]



###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시스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책임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성에 대해서도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

"고위공직자 무죄율 지나치게 높아"

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리 연루 고위공직자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부패척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은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 가량 높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나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현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은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확장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 기업의 형식적 독립성 확보 등의 반부패노력을 했지만 책임성이나 투명경영, 청렴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컴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옴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이날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사례연구'의 결과로 발표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http://ti.or.kr>)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30&article\\_id=0000012315](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30&article_id=0000012315)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책임성과 청렴성 개선 필요"

"전체 범죄기소율 56% → 공무원 범죄기소율은 37% 불과해" 지적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부정부패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5일 발표한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실태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책임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렴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와 감독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국민들에 의한 공공기관 감시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특히 지난 2004년 전체 범죄 기소율이 56%였던 반면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38%에 불과해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의 무죄 판결 비율은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보다 10배 가량 높았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점담할 특별 조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일시 : 2006-10-25 오전 10:59:12

편집일시 : 2006-10-25 오전 11:04:06

승인일시 : 2006-10-25 오전 11:04:16

## 한국 반부패 시스템 아직은 낮은 수준

[쿠키뉴스 2006-10-25 17:42]

[쿠키사회] 한국 사회의 반부패 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5일 한국 사회 청렴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행정부 감사기관 입법부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만 다소 향상됐을 뿐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 등은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행정부·감사기관·입법부 등 공공부문 10개, 정당·시민사회·기업 등 민간부문 5개로 나뉘어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공공부문 투명성의 경우 431개 공공기관 중 404곳이 윤리강령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돼 있는 250개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포함 모두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돼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88%(2003년)에 이르는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책임성은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모두 비효율적이고 내부고발시스템도 정착돼 있지 않다며 낮게 평가됐다.

공무원들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이 2003년 36%, 2004년에는 38%로 전체 기소율 56%에 한참 못미쳤다.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7.72%)도 일반인들에 비해(0.79%) 10배나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청렴성 책임성 등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뇌물공여, 횡령, 배임 등이 여전히 책임성, 투명성, 청렴성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정치인들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간부문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43&article\\_id=000042388](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43&article_id=000042388)

## 한국 반부패 시스템 아직은 낮은 수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반부패 시스템 실태보고서 발표

2006/10/25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mailto:kkjh@ngotimes.net)

한국 반부패 시스템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TI-K)는 한국 시각으로 25일 오전 9시 반 서울과 베를린에서 '2006년 한국 반부패 시스템 실태 보고'를 동시에 발표했다.



김고종호기자

한국투명성기구가 25일 오전 9시 반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수유리에서 '국가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NIS) 국제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는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30여 명과 국내의 공공·경제·정치·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했었다.

이때 열린 NIS 국제워크숍은 한 사회의 청렴성·투명성·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도·기관들을 모두 포괄하여 다뤘으며, 한국 부패 실태와 반부패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여 한국의 객관적 실상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25일 발표된 것이다.

발표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투명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책임성과 청렴성은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공무원 기소율을 보면, 2000년에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

가 갈수록 낮아져 2003년에는 전체 기소를 56%보다 무려 20%나 낮은 36%에 불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고종호기자

김준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2006(반부패 시스템 실태 보고서)'을 발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기소가 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무죄 비율이 0.79%에 불과했던 반면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의 무죄 비율은 무려 7.72%로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모니터링 시스템 증진 △엄격한 법 집행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등 네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고종호 기자 <http://kkjh.siminlog.com>

2006년 10월 25일 오후 17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Korea Herald] Study urges public sector clean-up**

Korea's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have made some progress in eliminating corruption but still have a long way to go, an international report released recently said.

According to the study, better reporting mechanisms should be put in place for public institutions.

The study, National Integrity System Korea 2006, was conduct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st laws do not explicitly provide for reporting mechanisms in details, yet in practice, all public institutions report to the higher instances," the report said.

It also said "public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accountable to the government and obligated to report to the President," while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institutions are only required to report to their next higher instances.

The report also pointed out that institutional audits were not held properly.

"Although Korea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deed subject to rigid oversight by law, in practice, much can be improved in terms of actual audit and inspection mechanisms," the report stated.

However, the organization acknowledged that out of 431 institutions, 404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established their own codes of conduct as of December 2005 to ensure integrit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ommended enhancing monitoring mechanisms such as the state-run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mproving public officials' ethics management systems and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public.

The organization also sai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ransparency and ethics education must be enforced.

"It's now time for us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and the world," officials at TI Korea said in a statement. "We must keep in mind that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and visible outcomes, K-PACT not disappoints people, but is itself international fraud." K-PACT, or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is an initiative between the public, private, political and civil society sectors to eliminate corruption.

(sharon@heraldm.com)

By Cho Ji-hyun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6/10/26/200610260013.asp](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6/10/26/200610260013.asp)